

보도시점 2024. 2. 15.(목) 08:30 배포 2024. 2. 15.(목) 08:30

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,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추진

- 2~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 투입, 최대 40~50% 할인 지속
- 농산물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,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수급불안 선제 대응
- 소상공인 전기요금(20만원) 지원,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차질없이 추진

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.15(목) 8:0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」를 주재하여 ①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,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.

* 참석부처: 교육부, 과기부, 외교부, 행안부, 문체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환경부, 고용부, 국토부, 해수부, 중기부 등

김 차관은 설 성수품 물가 관리 노력에 힘입어 16개 성수품 가격이 전년보다 3.2%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,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2~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하고,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(대과 3천톤, 과일 30만톤)·추가비축(배추·무 8천톤)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.

한편, ‘24년 경제정책방향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,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·대응하는 한편,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·집행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	책임자	과 장	황경임	(044-215-2810)
		담당자	사무관	유형세	(044-215-2811)
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보현	(044-215-2770)
		담당자	사무관	최봉석	(044-215-2771)

지금부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정부는 지난주까지 3주간 성수품 공급 확대, 할인 지원 등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였습니다.

정부 할인지원 포함 여부, 조사 품목·장소 등에 따라 기관별 조사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만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 기준으로 16개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(설 전 3주)보다 3.2% 낮은 수준¹⁾을 기록했습니다.

지난해 작황 부진 영향²⁾으로 가격이 높은 사과·배는 비축물량 확대, 정부 할인지원을 상향(최대 40%) 등을 통해 체감 가격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했습니다.

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,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.

2~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,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%~50% 할인을 지속하는 한편,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입니다.

대파 3천톤(~3월), 수입과일 30만톤(~'24.上)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, 배추·무는 8천톤을 추가 비축하여 3~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.

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.

1) 설 전 3주간 평균가격(% , 전년 동기 대비) : (전체)△3.2 (배추)3.3 (무)△16.3 (사과)10.4 (배)18.9 (한우)△3.1 (돼지)△6.7 (닭)△1.0 (계란)△11.9 (명태)△7.9 (오징어)9.4 (갈치)△11.2 등
2) '23년 과일 생산량(% , 전년 대비) : (사과)△30.3 (배)△26.8 (단감)△31.9 (감귤)△0.2 등

오늘 회의에서는 '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(1.4일) 한지
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
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.

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확대(1→6개국, 1.31일)³⁾ 하고,
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(1,500명→3,291명)를
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(1.19일) 하였습니다.

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
2.21일 신청·접수를 시작하여 3월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며,
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(연 매출 8천만원→1억4백만원)을 위한
시행령 개정 절차를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.

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
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러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

R&D 세액공제 확대,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한시 상향,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
일·가정 양립,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⁴⁾ 등은
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입니다.

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
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·대응해 주시고,
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
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·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모두발언 종료)

3) ('23년) 중국 → ('24년) 중국, 베트남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인도, 캄보디아

4) 남녀고용평등법, 근로기준법, 고용보험법 : 임신기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, 난임치료 휴가기간
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,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등